

□

경남사회연구소의 활동 현황과 과제

감정기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설립 경위

지방 차원의 지역연구가 갖는 중요성이나 그것이 일반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새삼스럽게 운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번 글에 앞서 다른 연구소나 연구회에 관한 글들이 이미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짚어 주었고, 거기서 적시하는 바들은 한국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 대개 무리 없이 수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대학과 지역사회연구모임

1. 대구사회연구소의 실상과 과제
2. 호남사회연구회의 활동 성과와 전망
3. 제주 4·3 탐구의 현상학 : 제주 4·3 연구소
4. 전남사회연구회의 활동과 과제
5. 현대와 실천을 위한 영남노동운동연구소
6. 충북지역사회연구회의 활동과 과제
7. 산학협동과 지역주민과의 가교, 경기지역사회연구소
8. 경남사회연구소의 활동 현황과 과제

같은 일단의 사실만은 아울러 확인해 두어야 할 듯하다. 즉, 연구소의 구실이 연구만이 아닌 참여적 행동에까지 미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필요는 국가의 과행적 발전전략의 회생양으로 일관해 온 지방에서 더욱 절실히, 기존의 대학 부설 연구소나 관변 연구소 혹은 보수적 성향의 각종 지역연구소들로서는 이러한 필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경남사회연구소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지방대학 교수들의 자각이 만들어낸 하나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일차적

으로는 지역사회에 관한 ‘데이터 뱅크’로서의 기능을 다하면서, 지역사회 내의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때로 이와 결합하는 기능까지 겸하는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든 연구소인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형태의 연구소 활동이 확산되고 고무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그 사례로서 경남사회연구소를 소개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에 몇 가지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경남사회자료연구실은 1989년 봄에 만들 어진 ‘경남사회자료연구실’이며, 연구소로 명칭과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은 1992년 6월의 일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남사회연구소의 특성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일반적인 대학 부설 연구소나 여타의 법인체 형태의 연구소와는 달리, 소수의 연구위원 교수들에 의해 꾸려지는 자주적 연구소라는 점이다.

경남사회자료연구실은 경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 계열 교수 10명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모두 민교협 회원으로서, 학내 및 사회 민주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역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의 상황에 관한 당시까지의 자료 정리 상태를 점검해 본 이들은 기초적인 자료조차 정리되지 못한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자료연구실의 필요성에 착안하게 되었으며, 각자 일정액의 설립 기금과 월회비를 각 출하여 이 연구실을 만들었던 것이다.

출범 이후 경남사회자료연구실은 마산·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보관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제공해 왔다. 그 동안 이들 자료는 연구위원 교수들 외에도 본교의 비연구위원 교수, 현장의 노동자, 타대학의 교수나 대학원생, 본교 학부생 등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던 중에 이처럼 주로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및 보관에 역점을 두었던 연구실의 기능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이 연구위원 교수들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함께 교육, 자문, 참여 등에 이르기 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연구실의 기능과 성격을 확대하여 경남사회연구소로 발전적 개편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연구위원 구성 및 연구소 운영

연구소로 새로이 출발한 이후 2명의 교수가 동참하여 현재는 12명의 교수가 연구위원으로 있다. 연구소 연구위원 참여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기존의 연구 위원들이 암묵리에 공유하고 있는 연구소의 이념이나 운영상의 협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참여자를 선별하고 있는 셈이다.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입회하려면 기존 연구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장치가 그것이다.

현재의 연구위원 전공을 소속 학과 및 세부 전공에 따라 구분해 보면, 사회학 전공이 5명으로 가장 많고(농업사회학, 산업사회학, 노동사회학, 사회운동론, 여성학), 경영학 2명(조직행동론, 인사관리론), 신문방송학 2명(신문 출판론, 방송매체론), 경제학(노동경제)과 사회복지학(노동복지) 및 철학(사회철학)이 각각 1명씩이다. 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노동문제 관련 전공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연령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에 속하는 비교적 젊은 층이며, 여성은 1명이다.

연구소의 운영은 연구위원 전체의 합의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수시로 소집되는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데, 토론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일정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연구소 운영의 총책임은 소장이 담당하며, 따로 연구실장을 두어서 연구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담당한다. 한

동안은 유급 실무간사를 두어 자료 수집 및 정리 작업과 연구소 살림살이 등을 담당하게 해왔으나, 현재는 재정과 공간상의 사정으로 유급간사를 두지 않고 있다.

이 연구소는 대학의 부설 연구소도 아니며 외부의 특정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부터의 어떠한 간섭이나 통제로부터도 자유롭다는 점에서 독특한 강점을 지닌다. 그런 반면 재정수입을 대부분 소속 연구위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된 재원은 연구위원 교수들이 부담하는 월회비와 자발적 기부금이며, 그 밖에 부정기적인 외부의 지원금과 발간한 보고서의 판매수익으로 이를 보충하고 있다. 연구소의 기본 정신에 의한다면 재정 독립을 해야 마땅하나,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부터는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된 각종 연구용역 등을 유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3년도에는 이 지역 출신 한 독지가로부터 약간의 재정 후원을 받기도 하였다. 1995년부터는 연구위원들의 소속 대학인 경남대학에서 소규모 연구모임에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또 1995년에는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언론 관련 세미나 및 시민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 형식으로 재정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연구위원들이 부담하는 연간 회비수입과 비교할 때, 이러한 외부 지원금이 연구소에 기여한 바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하겠다.

3. 연구소 활동의 내용과 방향

본 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활동을 성격에 따라 대별해 본다면, 자료 수집 및 관리, 지역사회 연구 및 보고서 발간, 월례 연구발표회, 시민강좌 등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교육, 지역

사회 단체들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이들과의 연대 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겠다. 이러한 활동 각각의 내용과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료 수집 및 관리

지역사회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류하고 관리하는 일이 초창기에 연구실을 설립하게 된 주된 동기 중 하나였고, 따라서 이 연구소가 역점을 두어 온 사업이다. 주로 마산·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경제와 산업 구조 전반에 관한 자료는 물론 기업 경영,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주민생활과 주민운동, 지역 언론, 지역사, 사회복지 관련 자료 등과 같이 연구위원의 전공에 따른 다양한 영역의 자료를 수집하여 왔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의 일부는 공동 관리하며, 나머지는 각 연구위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도 한다.

독특한 것은 그렇게 수집되는 자료 가운데 특히 지역 경제, 기업, 노동조합·노동 운동 등에 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 마산의 수출자유지역이 한국 경제문제의 일면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점과, 1980년대 이후 창원 공단이 국내 주요 산업기지의 하나로 부상한 점,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마산·창원 지역의 노동운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는 점 등의 지역사정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연구위원 교수 가운데 다수가 산업 및 노동 관련 문제에 개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특성과 관련이 있다.

특히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유실 가능성이 큰 자료들을 보존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본다. 그동안 지역의 노동조합들이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기 힘든 사정이었던 데다가 공권력에 의한 손괴, 노조 집행부 교체시의 불철저한 인수인계, 어용

노조에 의한 고의적 파기 등으로 자료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기대하기 힘들었던 것이 이 지역의 실정이었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나오는 관련 자료들을 연구소가 취합하고 정리함으로써 부분적이나마 이러한 자료 손실에 대비하는데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연구소가 수집·정리해 온 노동조합 관련 자료들을 들어보면, 1985년 이래 창원공단 및 마산 지역의 단위 노동조합들이 전개한 노동조합운동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단위사업장별 자료(예컨대 노동조합 설립 투쟁, 노조 민주화 투쟁, 임금인상 투쟁, 근로조건 개선 투쟁 등), 각 단위 노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노보, 홍보물, 조합원 교육자료, 임금인상 투쟁자료, 선거관련자료 등이 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산·창원 지역 이외에도 울산·부산·거제·진주 등 인근 지역과 전국 주요 사업장의 노동조합 관련 자료도 함께 수집·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마산·창원 지역 노동조합총연합(마·창노련)' 등 노동단체들이 적지 않게 협조해 주었다.

한편, 지역의 산업구조나 기업과 관련된 자료로는 마산과 창원의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마산의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와 창원 기계공업공단에서 발행하는 입주업체 현황자료, 경남은행에서 발행하는 『경남지역 경제분석』, 지역 일간지의 지역관련 경제기사 스크랩, 노조에서 수집한 회사 경영분석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운동 자료, 지역의 주민 실태 및 주민운동 관련 자료, 지역언론과 지역사 관련 자료도 일부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 가운데 지역사회의 경제와 노동의 동향에 관한 사항은 일지로 정리하였는데, 실무간사를 두지 않게 된 이후로 이 작업은 일단 중단한 상태이다. 일지는 수집된 각종 자료와 신문보도 자료 등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으며 날짜별, 기업체별, 주제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컴퓨터의 데이터 베이스 프

로그램으로 관리해 왔다. 지역노동운동 일지는 1980년부터 최근까지 다루고 있으며, 지역 일간지와 전국 노동자신문, 주간노동자신문, 마창노련 신문 등에서 보도된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지역경제 일지는 1991년부터의 지역 일간지와 중앙지의 지역경제 기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그런데 최근 부산에 영남지역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연구소(영남노동운동연구소)가 개설되어 이 부문에 관한 지역 자료를 수집하면서 일지 작업까지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작업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실무 작업에 필요한 손이 모자란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이 부문의 자료에 대한 우리 연구소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2) 지역사회 연구 및 보고서 발간

연구위원들을 통한 지역연구는 지금까지는 주로 개별 연구위원의 관심사와 시기별 지역현안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는 연구위원들이 공동으로 설정한 중장기적 기획에 따라 연구 활동과 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직은 연구위원들의 연구활동에 대해 특별한 연구비 지원을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외부로부터의 각종 지원금이나 연구용역 등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직 연구소 설립 정신에 걸맞을 만큼 연구성과는 많지 않았으나, 최근까지 연구위원들에게 의해 이루어진 지역연구의 성과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면 대체로 일부 영역에 치우친 경향을 보인다. 연구소가 수집하는 자료가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위원들의 주된 연구분야도 지역의 경제와 노동문제에 편중해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지역언론의 실태, 도민의 사회의식, 지방자치제가 지역의 언론이나 복지에 대해 갖는 의미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1990년대에

들어 개별적으로 혹은 연구소 단위로 진행된 지역연구는 줄잡아 20편을 상회한다.

3) 월례 연구발표회

연구위원 상호간에 연구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학제간 교류를 쇠하기 위해 매달 한번씩 연구발표회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발표자는 일차적으로 연구소의 연구위원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위원이 아닌 본교 혹은 타대학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발표를 하게 한다. 물론 발표회에는 연구위원 외에도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하여 들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월례 연구발표회와 병행하여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 지역사회의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여 연구소 연구위원들과 간담회나 토론회를 갖기도 한다. 1991년 이래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지역의 언론문제, 노동문제, 시민운동 등에 대해 방송사의 노조위원장, 신문사의 논설위원, 시민단체의 임원, 노동상담소장, 현장 노동자, 해고자 등을 초청하거나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모임을 가져왔다. 모임의 결과는 녹취하여 자료로 보관하거나 보고서로 간행하고 있다.

4) 시민교육

1992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지역언론학교’를 개설하여 지역사회의 각 시민단체 실무자들과 언론 모니터 요원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언론학교를 개설한 목적은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하여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언론을 감시할 수용자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1992년 8월에는 3개 강좌를 개설하였고, 1993년 6월에는 8개 강좌를 개설하였다. 1995년 11월에는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3개 강좌의 시민교육과 ‘지방자치와 시청자운동’이란 주제의 언론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 지역 사회 내의 각종 시민단체들이 홍보 등에 함께 협력하기도 한다.

이 밖에 지역의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들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5) 지원 및 연대 활동

연구소는 자문이나 상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 해결에 개입하거나 도움을 주는 일을 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에서 기업의 경영자료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 왔을 때 이를 처리해 주는 일, 임투나 단협과 관련한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일, 지역단체들이 사회조사를 할 경우 설문작성부터 통계처리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주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경남사회연구소는 대체로 자료수집과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통상의 연구소들과는 달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한편, 지역의 단체들과 연대하는 가운데 연구와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자료수집과 조사연구의 과정에 이들 지역단체로부터 조사요원 지원 등과 같은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협력활동의 예를 더 들어보면, 1991년부터 마·창노련 산하 각 노조 조사통계부장들의 분과모임에 연구소의 실무간사가 참여했던 일, ‘마·창지역 조합원 실태조사’나 ‘단체협약 비교표 작성’ 혹은 ‘조사통계 작업’ 등에 협조요청을 받아 지원한 일, 각 단사 조사통계부장을 대상으로 ‘조사통계학교’를 열었던 일 등이 있다.

또 1992년 10월부터 1993년 4월까지는 ‘마·창지역 고용문제 공동대책위원회’의 조사연구 부서에 참여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시민강좌 사업이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의 협력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4. 연구소 운영상의 문제점 및 과제

지금까지 열거한 바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연구소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내·외적 사정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과 해결과제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러한 지역 연구소가 활동하는 거시적 환경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문제를 연구하는 지방의 연구소가 활성화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및 의식적 상황이 그것이다. 권력, 자원, 정보 등이 중앙으로 집중된 오랜 전통이 불식되지 못한 채, 지방 문제의 연구에 상대적으로 적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지역연구에 대한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이 보잘 것 없는 것은 물론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 기업인, 시민운동단체, 연구단체들조차도 전반적으로 자신이 소속해 있는 지역의 연구를 위한 투자에 인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이러한 문제는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그것도 관련인들의 인식 변화가 병행되는 경우에나 가능할 것이다. 지방의 지역연구가 갖는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그러한 연구를 위한 투자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소의 존재형태와 관련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연구위원들이 같은 대학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연구활동과 운영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부설 연구소가 아닌 자주적 연구소 형태를 띠기 때문에 부딪치는 현실적인 애로가 그것이다. 학교 당

국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간·인력·재정상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으며, 연구소 단위로 지원하는 학술전총재단 등의 연구비를 신청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한편, 대외 관계에서도 약간의 제약이 없진 않다. 예컨대 이 연구소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관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하였을 때, 연구소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협조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가끔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추진해 봄직한 과제는 연구위원들의 지역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넓혀 나가는 일이 아닐까 싶다. 이로써 지역사회에 연구소의 존재와 성격을 보다 널리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연구소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한 가지 아쉬움은 연구위원들의 다양한 전공과 관심을 충실히 담아내는 연구소 단위의 연구성과가 아직 많지 않다는 점이다. 연구위원들 사이의 인적 결속이 탄탄하여 연구소 운영에 대한 이들의 참여도가 높은 장점을 지니면서도, 각자의 역량과 관심을 고르고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폭넓은 중장기적 기획연구를 추진할 재정적 기반이 약했던 것이다. 현재 기획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시켜 먼저 중장기적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이에 따라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접근방식을 바꾸어 갈 방침이다.

한편, 연구소는 지금까지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응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연구과제로 세워 두고 있다. 하나는 연구위원의 수와 참여 범위를 넓히는 일로서, 같은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들 중에 좀 더 다양한 전공분야의 교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방안과, 학교 밖의 인사들도 연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 나가는 방안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의 시민운동단체와 업무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 실무자로 하여금 연구소의 실무간사를 겸임하게 하

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간사와 공간 문제를 해소하면서 시민단체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전망 및 제언

경남사회연구소는 연구활동과 운영에 대한 각종 제도적 구속으로부터 자주적이고자 하는 연구소로서 현실비판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연구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와 유사한 연구단체는 명칭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미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이러한 연구단체가 살아남을 가능성과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우선, 가능성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 사실 주어져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은 지역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각각의 연구단체가 연구보조 인력, 재정, 자료원, 자료 정리의 노하우 등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관련 학계에서는 물론 연구단체가 소재한 지역별로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동시에 단체들간에 정보, 자료, 노하우 등을 나누기 위해 교류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 일부 학계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방향을 찾기 위한 가시적인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일부에서 머물러서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이처럼 연구단체들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개별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요컨대 지역별 연구는 연구단체들간의 협력과 교류의 폭을 넓히는 가운데 더 옥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류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구상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학회나 연구회를 구성하여 학술교류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PC통신을 통하여 일상적인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며, 주기적으로 종합적인 기획연구를 실시하는 방법 등에 이르기 까지 관련인들이 협의하기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행할 수 있는 역할들 가운데 역점을 두어야 하리라고 보는 한 가지만 덧붙여 제안하고 이 글을 맺고자 한다. 그것은 지역사회 내의 토착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가동하게 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이다. 각 지역사회 내에는 시민운동 세력으로 동원 가능한 인력이나 자생단체가 이미 적지 않게 산재해 있다. 이들을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이끌어 내고 조직화하여 실천활동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지역연구 단체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어렵다면 최소한 동참자로서 지적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은 가능할 것이다. 마산·창원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과 연구소 사이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현재 추진 절차를 구상하고 있는 중이다. ■

김정기/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경남사회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사회문제와 사회복지』(공저), 『미안마의 정치와 경제』(공저) 등이 있고, "한국노총 정치참여의 특성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농민복지정책의 발전과제와 농민주체적 역할"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